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2016년 예산 386.4조원, 복지예산은 31.9% 차지

01 주요 내용

- 2016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0.3조 원 감소한 386.4조 원으로 확정(15.12.3.), 보건 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23.4조 원으로 전년대비(115.7조 원) 6.7% 상승

(단위 : 조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예산	237	257.1	284.5	292.8	309	325.4	341.9	355.8	375.4	386.4
복지분야	56.1	61.7	67.8	73.9	78.9	84.8	88.7	97.2	115.7	123.4

- 복지 분야 예산 중 주요 예산은 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244억 원, ②광역치매센터 설치 22.6억 원, ③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37.2억 원, ④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00억 원, ⑤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428억 원, ⑥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자금 지원 41.7억 원, ⑦영유아 보육료 지원 31,066억 원, ⑧보육교사 근무수당 1,791억 원, ⑨육아종합센터 및 아이돌보미 940.7억 원 등이며, 상기 분야는 2015년 대비 증가

- 이번 예산의 특징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서민생활 안정 강화를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 예산 증대에 초점을 둔 것임

〈2016년 복지분야 예산 정부 예산안 및 국회확정, 증액 현황〉

구분		정부안	국회 확정	증액
보육	영유아 보육료	29,618억	31,066억	1,448억
	보육교사 근무수당	1,522억	1,791억	269억
	교사겸직 원장 수당	-	105억	105억
취약계층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301억	301억
	광역치매센터	11.3억	22.6억	11.3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3억	345억	22억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55억	95억	40억
저소득층 주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00억	200억	100억
	노후공공임대주택	190억	310억	120억
	LPG 배관망 신규지원	-	120억	120억

-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액 및 일자리 운영, 지역복지사업평가, 신종 감염병 대응·대책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었고, 누리과정예산은 빠져있고 대신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예비비 3000억 원 편성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 의회는 2016년 예산(안) 심의를 12월 2일~14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바, 중앙정부 예산 증감에 따른 조정 필요
 -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증액된 예산으로 인한 지방정부 부담의 문제 및 중앙정부 부담 비율 상향 촉구

2. 2016년 경기도형 NEXT 주민센터 설치

01 주요 내용

- 경기도는 NEXT 주민센터 설치를 위해 내년 2월,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 ('15.12.03)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교양·취미프로그램, 복지대상자 발굴, 일자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활성화 및 사회복지 허브로 전환
 - 내년 6월 도내 500여 곳에 설치
- 행정자치부 중심으로 추진되는 책임읍면동제(행정복지센터), 복지부 중심으로 추진되는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과 내용 비교 검토 필요

	책임읍면동	동 복지기능강화	NEXT 주민센터
목적	• 안전, 복지 중심 행정 체계의 효율화(시-구-동)	• 통합적 복지서비스	• 안전, 개발, 일자리, 복지 중심 주민자치
주체	• 행정자치부 (읍·동 공조직 대상)	• 보건복지부 (읍·면·동 공조직 대상)	• 경기도(읍·면·동 주민자치 조직 대상)
조직	• 책임동에 복지와 설치(3개 복지팀), 주민자치회 구성	• 읍면동 복지팀 설치,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주민자치회 중심의 자원봉사 위원회 활성화(시흥시 사례 확대)
인력	• 기능배분에 따라 40명~80명	• 복지인력확충(전국 6천명 총원)	• 일자리 상담사 배치(지역주민을 일자리로 연계)
업무	• 공공업무 : 동 기본 업무, 통합조사 및 관리, 자원관리 • 자치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중심, 일부 복지업무 가능), ※ 2015년 49개 시범사업 중, 2016년 확대예정	• 공공업무 : 방문서비스, 통합사례관리 • 민관협력 : 동 사회보장 협의체(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 2015년 7월부터 설치	• 자치 : 교양 및 취미프로그램, 소규모 위탁사업 운영, 자원봉사위원회, 일자리 연계 등 ※ 2016년 2월 시범사업, 6월 500개소 설치

*경기도 배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 책임읍면동제는 시-구-동으로 연계되는 행정체계의 비효율화를 극복하고, 주민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 책임동에는 복지과가 설치되어 과거 시나 구에서 실시하던 업무를 위임
-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은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 복지팀을 설치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동에서 추진
- NEXT 주민센터는 공공조직이나 인력을 재구조화하는 공공전달체계 개편보다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에 주로 집중
- NEXT 주민센터는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 우려
 - 행정자치부는 책임읍면동제 확산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확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형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생활밀접사무를 협의할 수 있고 위탁사무의 처리, 일부 위임사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주민자치회 강화와 유사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동복지협의체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자원연계 활동이 NEXT 주민센터의 자원봉사 위원회 활성화와 유사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전달
 - 읍면동에는 여러 주민자치조직들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업무와 역할 부여는 일선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주민자치회, 동복지협의체와 업무중복문제 점검 필요
 -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자원발굴 및 연계는 동복지협의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소규모위탁사업 등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은 주민자치회와 일부 중복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2015년 경기도민 행복지수 54.75점

동아일보가 <2020 행복원정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아행복지수'를 개발하고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발표

- 동아일보가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할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동아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기존의 행복지수가 거시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행복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새로 개발하고 20~50대 1,000명에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측정항목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심리적 안정, 가정생활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업무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도, 환경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건강상태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
- 주관적 행복지수 조사결과 전체 설문대상자 평균 행복지수가 57.43점이며, 지역별 비교에서 경기·부산·서울과 같은 수도권지역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
 - 전국 16개 시·도(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중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은 8개 분야 평균 60.11점을 차지한 충남으로, 가족·대인관계·심리 분야 점수가 높게 분석되었고, 5위를 차지한 강원지역의 경우 건강·환경 분야에서 높은 점수 차지
 - 반면 하위권에 머무른 5개 지역은 부산·경기·경북·서울·인천 등 대부분 수도권 도심지역으로 분석됐는데, 이러한 결과는 더 나은 외부환경이나 타인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행복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임. 일례로 서울의 경우 강남3구 행복지수가 63.17점인데 비해 나머지 22구의 평균은 53.61점으로 강남권과 약 10점의 격차 발생

<2015년도 지역별 행복지수 (100점 만점)>

충남·세종	전북	전남	제주	강원	경남	울산	광주
60.11	60.06	60.03	59.97	59.93	59.61	59.50	57.69
충북	대구	대전	인천	서울	경북	경기	부산
57.46	57.35	56.51	56.26	55.38	55.20	54.75	52.74

*단위: 점

- 지역요인 외에도 연령·경제요인이 행복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연령에 따라서는 행복지수가 U자형으로 5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짐
 - 사회구성원의 근본적 행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집중하는 문화 형성 노력이 공존해야 할 것임

2.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015년 제2회 예비사회복지사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12. 16.(수) ~ 17.(목) 10:00 ~ 18:00 • 장 소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실 • 주 최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대 상 : 전문대학 2학년 이상·대학교 3학년 이상 재학생 ※ 문 의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252-7554)

03 FACT CHECK

행복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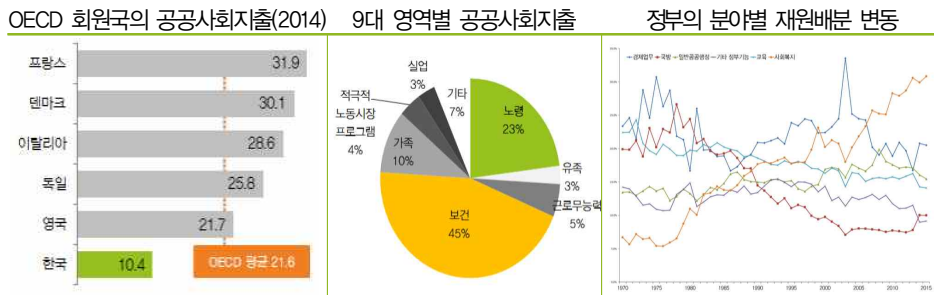
-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측정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산
 - GDP의 한계를 사회 및 환경 지표로 보완하려는 시도로, 국제기구인 OECD BLI(더 나은 삶 지수), UN Post-2015, EU GDP and Beyond 등이 있음
- '행복'은 '주관적 웰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 및 부정적 정서 경험, 삶의 의미와 같은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측정
 - 행복은 반드시 '삶의 질' 또는 '생활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에 따라 행복 기준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UN은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약 8% 정도라고 발표
 - 기초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행복은 소득보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음
 - 동일한 소득이라도 소비관, 물질만능주의 풍조, 공동체 의식, 전통관 등에 따라 행복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며, 사회적 신뢰, 직업의 질, 선택의 자유, 정치 참여 정도 등이 더 중요
-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은 가족생활과 결혼생활의 안정, 심리적 안정, 본인과 가족의 건강, 가족·친구·직장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등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그 다음은 일과 관련된 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으며, 재산 및 소득과 같은 경제적 안정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소 후순위로 나타났음

*안정된 고용, 개인의 자유와 안전, 높은 수준의 신뢰, 견고한 공동체,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복지수에 관한 연구.2008.

04 통계로 보는 복지

공공사회지출 추이



자료: 국회예산처, 2015(좌), (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 (우)한국은행 국민계정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2004년 이후 복지지출 비중 증가율이 연평균 5.7%로 OECD 평균(1%)보다 높았지만, 절대 수준은 취약
-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보건의출이 45%를 차지
 - 노령영역은 23%이나 국민연금제도의 성숙과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정부지출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6.7%에서 2015년 30.8%까지 증가, 2007년 사회복지 지출이 전체의 25.7%를 차지한 이후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음

*단위 :%

*2011년 기준